

세종시 민심, 충청권의 미묘한 균열

충청 민심 달라지면 박근혜도 달라질까

신용호·구희령 기자 novae@joongang.co.kr

“좋은 수정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충청 주민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한 측근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 한나라당 내 친이와 친박은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면서 충청권의 민심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충청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 세종시 원안 추진론자와 수정론자의 명암은 갈리게 된다.

청와대와 친이계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전략을 다소 변경했다. 총리실이 중심이 돼 만들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발표 시기를 이달 중순에서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세종시 계획의 수정을 관철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청 민심을 확실히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MB “좋은 수정안만큼 충청 민심도 중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충청 민심이 화가나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닌 정책의 문제인 만큼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 민심을 달래는 일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여론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불씨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12월에 수정안을 내놓는 걸 늦춰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도 공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충청지역 주민에게 수정 추진 작업의 진정성을 알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점을 청와대도 인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치권에선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충청 민심이 변하면 수정 문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박 전 대표를 만나 설득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박 전 대표가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려면)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구해야지 나한테 할 일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친박계의 한 의원은 “충청 도민들이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면야 박 전 대표가 굳이 원안을 고집할 이유가 있



이완구 충남지사

지사직 면직 이완구 충남지사

“충청 민심은 격앙된 상태 어떤 대안도 받아들일 준비 안 돼”

수정 지지 밝힌 남상우 청주시장

“KTx 등 충남 배려로 충북 소외감 백년대계 위해선 정책 수정 가능”

겠는가”라며 “당연히 충청도민의 마음이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이정현 의원은 “충청 민심이 변할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세종시 문제를 바라보는 충남과 충북의 시각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선 이완구 도지사가 사퇴를 선언하자 지방의원들도 동반 사퇴 입장을 밝히는 등 수정론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충북 지역에선 자치단체장들이 수정을 찬성하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충남북 어느 한쪽만 바라보고 충청 민심을 재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북의 경우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민심의 운도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충남에선 이 지사와 행동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충남도의원 전 원(20명)은 3일 “더 좋은 수정안은 나올 수 없다”며 도의원직 사퇴서를 의회 당 원내대표에 제출했다. 같은날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도의원 14명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충북에선 한나라당 소속의 남상



남상우 청주시장

우 청주시장에 이어 엄태영 제천시장이 공개적으로 세종시 계획 수정을 찬성했다. 중앙일보가 4일 대전·충남북 33개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충남은 16명의 자치단체장 중 15명이 원안 추진에 찬성했다. 하지만 충북지역 단체장 12명 중 6명이 원안, 3명은 수정 쪽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3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정우택 충북지사의 행보도 이완구 지사와는 다르다. ‘원안 고수’가 정 지사의 입장이지만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다소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SUNDAY는 한 주간 충청 민심을 대변했던 이완구 충남지사와 남상우 청주시장을 만나 각각 인터뷰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수정안 추진에 반발해 3일 전격적으로 지사직을 내놓았다. 남 시장은 지난달 30일 충청지역 단체장 중 처음으로 “대통령의 고뇌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수정에 찬성했다.

다음은 이완구 충남지사와의 일문일답.

이완구 “정 총리, 충청과 먼저 대화했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사직 사퇴를 만류하지

않았다.

“박형준 청와대 정부수석이 찾아와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지사직을 사퇴했지만 한나라당을 탈당 하진 않았다. 총리직이나 대권을 노리는 정치적 야심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판에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이 막중한 도지사직을 내놓는데 정치적 야심은 무슨... 자리를 던지면 대중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외롭고 고단한 길로 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고뇌하는 모습은 국정에 참여한 도정의 책임자 입장에서 충분히 기쁘게 와 닿았다. 진정성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이들이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을 소홀히 다뤘다고 본다. 정운찬 총리가 수정을 언급했을 때부터 충남도지사와의 대화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총리가 충청도 사람이면서 왜 대화를 못하나. 이 점을 충청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정 총리가 수정론을 얘기한

중앙SUNDAY·EAI·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세종시 수정 필요성엔 공감, 정부 추진 방식엔 불신

정한울·정원철 EAI 여론분석센터 연구원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 내 친이 대 친박, 여와 야, 충청권과 비충청권, 심지어 진보 대 보수의 갈등과 중첩되면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대통령이 과거의 입장에서 선화한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하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선 상황이지만 앞으로 여론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수정론 우세 여론을 앞세우며 수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당과 반대진영 역시 정부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반대 여론을 근거로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SUNDAY는 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국민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 날인 11월 28일에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세종시 문

원안 유지 31% vs 수정 지지 50%
‘대통령 대응 공감 않는다’는 53%
4대 강 사업은 59%가 반대

제에 대한 국민 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세종시 수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정부의 추진 방식에 대한 강한 불신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 결과 응답자의 31.4%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업도시로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0.4%였다. 그러나 모르거나 답을 하지 않은 유보적인 태도도 18.2%에 달했다.

세종시 추진 방안과 내용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과 대응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39.8%,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정부의 세종시 추진 방안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사업에 대한 선호



52.5%로 나타났다. 세종시 추진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과반수에 달하면서도 대통령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셈이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해 가는 방식에 대해선 불신과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정부의 세종시 추진 방식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9%,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4.3%로 긍정적인 답변이 34.3%에 불과했다. 또 ‘별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36.7%, ‘매우 잘못한다’는 22.1%로 부정적인 응답이 58.8%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에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41.7%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 37.3%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